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2007. 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2007. 4

이 교 덕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임 순 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 영 태 (북한연구실장)

최 수 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체제유지의 정치적 기반 강화와 국제적 보장 확보	2
1. 김정일 우상화	2
2. 군부의 충성 강화	3
3. 외부위협 의식 고취	4
4. 대미 유화를 통한 관계 개선	5
5.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보장 확보	6
6. 대중관계 회복	7
7.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대일관계 개선	7
III. 통치의 효율성 강화와 경제건설	8
1. 경제강국 건설 강조	8
2.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강화	9
3.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각의 노력 강조	10
4. 남북경협 중시	10
5. 대외경제활동의 촉진	11
IV. ‘2·13 합의’의 사회적 영향 최소화과 사회통합	12
1. 핵 보유 선전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체제결속 강화	12
2. ‘2·13 합의’의 선별 보도를 통한 주민 혼란 방지	12
3. 경제강국 건설에의 주민 관심 전환	14
4. 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14

V. 남북관계 복원과 민족공조 요구	15
1.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15
2. 민족공조 주장 강화	17
3. 남한정국에의 영향 시도	18
4. 선군정치 지지 유도	19
5. 민간교류의 활성화	20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

I. 문제제기

-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2·13 합의’가 이루어진지 두 달 가까이 흐른 지금, 방코텔타아시아(BDA)문제로 제6차 6자회담이 휴회되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달라진 협상태도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지난 3월 5~6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가 하면 중간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설을 생략하고 바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자는 과감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도됨.
-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무회의와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북 시 핵시설 폐쇄 의지를 다시 천명했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함.
- 6자회담에의 복귀를 완강히 거부해 왔던 북한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대외적 행보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함.
- 본 보고서는 이런 의문에서 ‘2·13 합의’를 전후하여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보이고 있는 동향과 그 배경을 분석하고자 함.

II. 체제유지의 정치적 기반 강화와 국제적 보장 확보

-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남한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사용가능한 협상카드를 모두 소진한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 보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

1. 김정일 우상화

- 선군혁명선구자대회(2.5~6),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발표회(2.9), 김정일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2.15) 등의 주요 정치행사를 통해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면서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과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충성을 요구
 - 김정일 65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김정일이 곧 김일성이며 김정일이 있어 김일성이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 김일성의 역사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고 찬양
 - 2002년에 이어 올해에도 생일 축하문을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공동명의로 전달하여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변함없음을 시사
-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끈 선군영장”이라는 상징조작과 김정일의 인자함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주민의 복종과 존경심을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치 시행

- 김정일 생일과 음력설이 겹치는 주말을 전후해 5일간의 연휴 동안 각 가정에 24시간 전기 공급
- 2월 초 각 기관과 기업소 등에 지시하여 한 달분의 식량을 모든 주민에게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하고, 가구별로 식용유 500g, 설탕 1kg, 술 1병 등을 공급
- 묘향산 바위에 “선군영장 김정일 장군”이라는 글씨 조각

2. 군부의 충성 강화

- 김정일은 군부대 방문과 군관련 행사에의 참석 등 여전히 군대의 절대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 2007년 3월말 현재 김정일의 군관련 활동은 5회로 총 16회의 약 30%를 점유¹⁾
 - 군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김정일의 군관련 공개활동은 북한이 대외환경 개선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2000년과 2002년 경우에도 각각 38%, 37%였음.²⁾
- 선전당국은 신년 공동사설, 선군혁명선구자대회, 김정일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등을 통해 핵실험과 선군정치의 합리화에 주력
 - 신년 공동사설에서 선군정치의 중요성을 되풀이 하며 국방력의 지속적 강화를 강조
 - 선군혁명선구자대회와 김정일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최태복 비

1)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832호」. 그 밖의 공개활동 내용은 경제 분야 4회, 대외 분야 1회, 기타 6회임.

2)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699호」.

서는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위대한 선군정치의 자랑찬 승리이고 5천년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의 선군사상과 노선을 당과 혁명의 변함없는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³⁾

3. 외부위협 의식 고취

- ‘2·13 합의’가 이루어진 당일에도 방송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및 전쟁준비를 비난
 -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역행해 미국은 전쟁준비를 계속 다그치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고 주장⁴⁾

- 김정일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 등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강경대응을 천명
 -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맞서 김정일 중심의 단결과 군민일치를 촉구하면서 “힘에는 힘으로, 도발에는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으로 대답”할 것을 다짐

- 선군혁명선구자대회에서도 “반제, 반미 계급의식을 철저히 지켜 적들의 악랄한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술 것”을 주장하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국방력과 혁명의 총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

3) 『조선중앙통신』, 2007.2.5, 2.15.

4) 『조선중앙방송』, 2007.2.13.

4. 대미 유화를 통한 관계 개선

- 2006년 핵실험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10.11)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인 바, 미국의 위협을 더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음을 천명
 - 「조선신보」(12.20)도 북한이 부당하게 가해진 유엔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들이 해제되어야 하나 국면타개를 위한 노력에서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 체제지탱의 골간을 중국에 의존해 왔으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데 대해 실망하고 중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향후 상황에 따라 중국과 미국 간의 잠재적 갈등관계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 모색
 - 중국은 2006년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탕자취안 국무위원을 북한에 파견하여 김정일에게 핵실험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을 전달(10.19)
 -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사일 및 핵실험 뒤 북한이 6자회담 해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언급⁵⁾

- 마지막 협상카드인 추가 핵실험을 사용할 경우 가해질 국제적 제재를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보유한 핵능력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
 - BDA문제 해결, 테러지원국 제외문제 논의 등 미국의 입장 변화와

5) 「동아일보」, 2007.3.29.

이러한 변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북한도 간파

- 「조선신보」(3.5)는 북한이 앞으로 진행될 실무그룹회의의 협상에서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관련 의혹을 해소할 의향을 보이고 있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5.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보장 확보

-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한다는 증명으로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제거를 요구
 - 미국이 ‘2·13 합의’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대북 적대시정책의 전환과 관련한 조치를 약속하였다고 보도⁶⁾
 -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BDA문제에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었으나 실망할 필요는 없으며 북한은 ‘행동대 행동’ 원칙이 관철된다면 ‘2·13 합의’ 이행의 속도를 내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⁷⁾
- 김정일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등 쟁점현안 논의를 위해 부시 대통령과의 친서 교환과 부시 대통령의 ‘고위급 특사’의 평양 파견을 희망
 - 김계관은 ‘9·19 공동성명’ 직전 미 재무부의 BDA 계좌 동결조치 발표와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직전 유엔개발계획(UNDP)의

6) 「조선신보」, 2007.3.17.

7) 「조선신보」, 2007.3.22.

대북사업 중단 발표 등으로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
피력⁸⁾

6. 대중관계 회복

- 중국이 미국의 BDA북한계좌 동결에 협조한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 이 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의도로 김정일이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3.4)
 - 대내외에는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굳건함을 과시

7.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대일관계 개선

- 북한은 일본이 북·미관계 진전속도에 따라 수교회담을 조절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
 - 북한은 북·일 수교회담이 “조선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융합체를 다른 편으로 한 역사상 유별스런 회담”이라고 평가⁹⁾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한개 주나 다름없는 일본이 구태여 지방대표로 6자회담에 참가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¹⁰⁾

8) 「연합뉴스」, 2007.3.30.

9) 「천리마」, 2001.3 ; 「로동신문」, 2003.10.30 논평에서도 북한은 “일본의 체질적 특징에 대해 물으면 누구든지 대미추종을 첫 손가락으로 꼽을 것”이라고 비난

10) 「조선중앙통신」, 2006.11.4.

- 하노이에서 개최(3.7~8)된 북·일 관계정상화 회의에서 일본의 납치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이미 2002년에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 회담을 결렬시켰으나 쟁점인 납치문제 재조사를 일본이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조선총련 탄압을 중지하며 과거 청산을 시작할 경우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

Ⅲ. 통치의 효율성 강화와 경제건설

- 통치의 효율성과 정권의 안정성은 정권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정권의 침투력이 향상될 때 제고되는 바, 이를 위해 경제난 타개에 주력

1. 경제강국 건설 강조

- 그동안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림으로써 경제적 곤란이 불가피하다고 선전해 왔으나 핵무기 개발로 이제는 경제건설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
 - 2007년은 김정일 총비서 취임 10주년의 해
- 군사강국 목표가 핵심임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하는 징후
 -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은 현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라고 하면서 국방력 강화보다 경제부문을 먼저 언급
 - 선군혁명선구자대회 보고에서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

적으로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드디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실질적으로 총화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나가는 격동적인 투쟁의 년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

- 핵실험 후 곳곳에 내걸렸던 핵 관련 구호가 사라지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와 같은 구호가 등장

-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11기 5차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4.11)한다는 것을 공지한 바, 회의에서 예산과 더불어 경제관련 정책방향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예상

2.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강화

- 2007년 1/4분기의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는 4회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
 - 희천시내 공장 현지도(1.20)
 - 태천4호 청년발전소 현지도(1.22)
 - 어랑천1호발전소, 장연호양어장, 청진기초식품공장, 군민발전소 현지도(2.8)
 - 박천견직공장 현지도(3.14)

<1/4분기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회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회수	1	2	2	2	3	3

3.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각의 노력 강조

- 신년 공동사설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2.2) 등을 통해 내각의 책임하에 농업발전과 인민소비품 증산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
 - 김정일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도 “현시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높이는 것”임을 강조
 - 선군혁명선구자대회에서도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 해결에서의 획기적인 진전과 4대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에 대한 적극 지원을 결의

4. 남북경협 증시

-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중단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경협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
 - 신년 공동사설에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
 - 남북장관급 회담(2.27~3.2)에서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논의하게 될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를 남한이 요구한 4월이 아니라 3월에 당장 실시할 것을 주장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3.15)에서 열차 시험운행 후에 이루어질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구
 -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도 개성을 방문한 이재정 통일부장관

에게 경공업 지원 합의를 상기시키며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¹¹⁾

5. 대외경제활동의 촉진

- 미국의 BDA 자금 동결 조치 이후 그 동안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으로 훼손된 국가 이미지 회복과 대외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해 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자금세척방지법’을 채택
 - ‘자금세척방지법’은 “금융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비법적인 자금, 재산의 조성 and 유통을 막고 금융체계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제정 목적이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북한 영역 안의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
 - 자금세척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이나 재산으로서는 위·변조한 화폐 및 증권이나 그 거래, 마약·무기의 밀수·밀매, 불법 화폐·상품 매매·부동산 거래, 매음·도박·뇌물·협잡·횡령·강도 등으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으로 명시¹²⁾

- 외국의 적극적인 대북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평양법률사무소를 개설(1.11)해 외국투자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
 - 평양법률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동포,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공민들의 신청과 위임에 의한 법률봉사를 제공
 - 외국투자자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 앞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법률사무소의 봉사를 받도록 권유

11) 『경향신문』, 2007.1.25.

12) 『연합뉴스』, 2007.3.29.

IV. ‘2·13 합의’의 사회적 영향 최소화와 사회통합

1. 핵 보유 선전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체제결속 강화

- 핵실험 및 “핵억제력” 보유의 필요성·중요성 홍보를 통해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이반 방지
 - 핵실험은 2006년 미국의 “노골적인 핵 선제공격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으로 인해 “나라의 최고이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조성”된 데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로 선전
 - 선군혁명선구자대회를 통해 ‘핵억제력’을 보유함으로써 “조국의 존엄과 위력이 과시”되고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역설

2. ‘2·13 합의’의 선별 보도를 통한 주민 혼란 방지

- 핵실험 이후 그 성공을 환영하는 도·시·군 단위의 군민환영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선전소재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핵 불능화의 ‘2·13 합의’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곤란한 상황
 - 사실보도가 초래할 수도 있는 주민 동요 및 김정일 위대성 훼손을 우려
- ‘2·13 합의’와 관련하여 5개 실무그룹 구성, 초기조치 이행 시한, 구체적 지원 요건 및 과정 등 초기조치 합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지원 제공, 북·미 양자회담 개최 예정 등만 간략하게 보도

-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로 표현하여 의미를 축소
- 합의 파기 가능성을 생각하여 보도에 조심
- 외무성 등 정부당국이 아닌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¹³⁾
- 『로동신문』도 ‘2·13 합의’ 관련 기사를 미공개
- 김계관 부상의 방미와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 실무회의 등 북·미회담 관련 내용도 미보도

○ 내부적으로는 축소 보도하는 대신 대외적인 입장 표시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활용

- 『조선신보』는 ‘2·13 합의’ 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¹⁴⁾ 미국의 BDA 북한계좌 동결 해제가 “2·13 공동합의문을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리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징후”라고 평가¹⁵⁾
- 이후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보인 태도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

13) ‘9·19공동성명’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보도하고 합의문 전문을 방송매체 통해 공개. 베를린 북·미회담(1.16~18) 결과와 관련한 보도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외무성 대변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도

14) 『조선신보』, 2007.2.13 “<제3단계 5차 6자회담> 조미신뢰조성, 《행동 대 행동》의 시작 - 9.19공동성명리행 초기단계조치 합의도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 작성.

15) 『조선신보』, 2007.3.16.

3. 경제강국 건설에의 주민 관심 전환

- 핵 포기과 대미·일 관계정상화 등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 초래될 수도 있는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와 체제동요를 우려하여 6자회담에 쏠린 주민들의 관심을 내부로 돌리고자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신년 공동사설과 선군혁명선구자대회 등에서 경제문제 해결에 국가적 힘을 집중할 것을 강조
 - 평양시내 곳곳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95돌을 맞는 올해 경제강국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자”는 현수막 게시

4. 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 2월에서 3월 사이 선군혁명선구자대회, 전국법무일꾼대회(2.28), 전국혁명사적일꾼대회(3.14) 등 전국적 규모의 각종 대회와 언론매체를 통해 주민들의 사상 이완 및 일탈 행위 방지와 체제결속을 도모
 - 「로동신문」(3.26)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하자”는 사설을 통해 “우리 나라가 처한 안팎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면서 “사회주의 교양을 더욱 끈기있게 벌여 우리식 사회주의 사상 진지를 철벽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전국법무일꾼대회에서도 “원수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모두가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차넘치게 해야 할 것”을 요구

- 청년들에 대한 자본주의 문물의 유입을 경계하면서 혁명의 1·2세대들이 지녔던 혁명적 원칙성·계급적 입장을 따라 배워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책동을 배격할 것을 촉구

- 미국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불순 녹화물과 미신 등을 선전하는 출판물을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들이밀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쉬버려야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우리 내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¹⁶⁾

- 향후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에 따른 핵 포기 및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실현을 상정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상교양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주민통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으로 예상

V. 남북관계 복원과 민족공조 요구

1.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 ‘2·13 합의’ 당일, 전날에 제의된 남한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남북대화 복원을 내심 원하고 있었음을 시사
 -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한다는 등 6개항에 합의
 - 후속 적십자 실무접촉,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 열차시험운행

16) 『로동신문』, 3.11, 3.22.

실무회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

- 남북간 북핵문제의 논의 자체를 되도록 기피해 왔던 태도에서도 벗어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 한다는 데 합의
 - 실제 6자회담에서도 남한의 제안과 역할을 인정
 - 남한의 경제적 지원과 남한을 통한 미국의 대북 압박 완화를 기대

- 『로동신문』은 “남북관계발전은 서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보도(3.14)를 통해 “지금 북남관계는 다시금 회복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으나 우리 민족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현추세는 외세의 간계에 따라 또다시 결단날 수 있다”고 우려
 - 현재의 남북관계가 장관급회담 개최 등으로 회복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이후 냉각되었던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을 외세와 친미보수세력에 전가

- 김용순의 사망 이후 공석으로 있던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에 국제사정에 밝은 김양건 국방위원회 참사를 3월 중순 임명함으로써 대남업무라인의 구심점 정비와 함께 남북관계를 국제정세와 조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

2. 민족공조 주장 강화

- 핵실험 이후 가중된 국제적인 대북 압력에서 민족공조를 내세워 남한의 이탈을 유도
 - 민족공조 논리로 남한의 대북 경협 및 지원의 명분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사회내에 팽배해진 반미 감정에 편승하여 미국을 화해·협력의 방해 주범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한·미공조 이완을 시도¹⁷⁾
 -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1.17)을 발표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비롯한 민족공동협력사업 활성화 및 남한 정부의 대북제재 참여 중단 등을 요구

- 신년 공동사설과 김정일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이라는 3대과업의 실천을 요구
 - ‘민족중시’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 배격’, ‘평화수호’는 ‘미군철수 투쟁 강화’, ‘민족단합’은 ‘반보수대연합 실현을 통한 매국 친미반동 보수세력 매장’을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

- ‘민족중시’와 관련하여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RSOI/FE; 3.25~31)을 비난하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대변인은 “남 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명(3.10)

17) 북한은 이미 2004년에 “남조선의 민심은 반북대결에서 련북화합으로, 친미에서 반미로 돌아서고 있으며”(『통일신보』, 6.5) “민족공조력량, 통일애국력량이 비할 바 없이 장성강화됨에 따라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 대 남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으로 되는 역사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로동신문』, 6.15)

- 지난해에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주장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18차 장관급회담을 3월에서 4월로 연기
 - 2월의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도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
- ‘평화수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장본인인 바, ‘미군 철수는 조선반도 평화수호의 중요담보’라며 민족의 장래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전평화를 위해 미군철수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문¹⁸⁾
 - ‘민족단합’과 관련하여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단합을 해치고 동족을 적대시하며 대결을 추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시급히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철폐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을 선동
 -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2.9)를 통해 진보개혁 세력들이 보안법으로 간첩혐의를 쓰고 처형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낡은 대결시대의 산물인 보안법의 철폐투쟁을 반한나라당 투쟁과 결합시켜 나가자고 호소

3. 남한정국에의 영향 시도

- 연초부터 남한의 대선을 겨냥하여 대남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28호는 “한나라당의 재집권 책동은 북남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돌려세우고 조선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등 민족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죄행”이기 때문에 “결

18) 「평양방송」, 2007.2.21; 「조선중앙방송」, 2007.2.24.

코 남 내부분제로만 될 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사할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¹⁹⁾

- 이후 「조국통일연구원」의 한나라당 비난 비망록 발표(2.5)와 「조평통」대변인 기자회견(3.27) 등을 통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반보수연합의 결성과 투쟁을 선동
 - 「조국통일연구원」 비망록은 한나라당이 “미국의 비호 밑에 6·15 지지세력들에 대한 반동적 공세와 친미사대,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집권책동을 결정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고 역설
 - 「조평통」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조정도 비난하면서 “지금 한나라당은 6자회담 합의와 북남관계 재개로 조선반도 정세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몹시 불안해하면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폄하
 - 「평양방송」(1.22)에서도 “대선을 계기로 조국통일을 반대해 나서고 있는 친미 반동 보수세력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요구

4. 선군정치 지지 유도

- 제19차 장관급회담(2006.7.11~14)에서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주는 선군정치”라는 주장을 제시한 이후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면서 선군정치 옹호를 유도
 - “지금 미제가 선군으로 다져진 강위력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에 대하

19) 「조선중앙방송」, 2007.1.5.

여 비방 중상하고 있지만 실지로 남 인민들은 그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덕을 보고 있으며 선군이 없었더라면 남에서 지금과 같이 정당 활동과 기업활동, 개인의 평화로운 생활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강변²⁰⁾

- 선군정치의 선전을 위해 남한의 친북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
 - 「조평통」 대변인 성명(3.31)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민족끼리’와 통일 운동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남조선 주민들의 직접 접속과 이용을 지금까지 막고 있고 인터넷에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글들을 올린 사람들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배신한 행동”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5. 민간교류의 활성화

- ‘자주’와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하에 사회·문화분야 중심으로 각종 남북공동행사의 개최에 합의하는 등 대남 민간 대화 및 협력을 적극 수용
 -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7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의 평양 개최, 8·15 통일행사의 남측지역 개최를 제의(1.30)
 -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중국 심양에서 개최(3.8~9)하여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부문별 교류행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6·15와 8·15 공동행사를 이전보다 더 성대하게 치르기로 하는 등에 합의

20) 「조선중앙방송」, 2007.3.19.

- 제6차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중국 장춘: 1.28)에서 남북 선수선 수단 공동입장
-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금강산: 2.20)
- MBC 주몽제작진(3.17),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참관단(3.22), 남북 나눔운동대표단의 평양 방문(3.28) 수용
- 북한 청소년 대표팀 선수 및 임원의 남한 전지 훈련(3.20) 허가

○ BDA 동결계좌 해제, 미국과 관계개선 전망,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등 경제발전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에 자신을 가지고 남북 민간교류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

- 책임집필·정치분야 집필: 이교덕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경제분야 집필: 최수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사회분야 집필: 임순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대남분야 집필: 정영태 (북한연구실장)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시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시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북한인권 :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Studies Series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통일정세분석 2007-04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 팩스 : 901-2544
인쇄처	도서출판 늘봄 전화 : 2275-5326
인쇄일	2007년 4월 일
발행일	2007년 4월 일
